

# 전문가들 “여름 독감, 내년까지 갈수도”

### 독감 의심환자 1000명당 12.5명...올해 유행 ‘기준’ 2.5배 ↑ “올 가을 백신 접종률에 따라 내년 유행 양상 달라질 수도” ‘감기약 품질’에 법령·제도 개선 제안...소아과 대책 지적도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이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내년 여름에도 이어질 수 있다며 감기약 등 의약품 체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2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코로나19) 방역 정책들이 호흡기 바이러스를 막는 정책이었지만 해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유행하게 된 게 (독감 유행의) 본질적인 이유”라면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독감 유행이) 충분히 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올여름 독감 환자 급증 원인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 정책을 꼽았다. 지난 3년간의 방역 정책으로 개인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환자가 늘었다는 것이다.

천은미 이화여자대학교 호흡기 내과 교수는 “3년 동안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었다가 한 번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순차적으로 지금 감염이 다 되는 것”이라면서 “독감이 이례적으로 여름에도 유행이 줄지 않고 있고 가을이 되면 새로운 아종이 나오면 또 한 번 유행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아이들이나 감염이 덜 됐던 분들 중심으로 한번 면역을 갖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경로를 밟게 된다. 내년 4월 정도 되면 대부분의 독감 유행은 끝나고 다시 9월에 유행이 된다”고 분석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의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에 따르면 올해 32주 차(8월6일~12일) 외래 1000명당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12.5명이었다. 32주 차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직전 주(14.1명)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22~2023년 절기 유행 기준인 4.9명과 비교하면 2.5배 이상 높다.

일각에서는 올 하반기에 실시할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 유행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통상 독감 예방 접종은 9월 중순부터 실시한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올가을에 접종하는 독감 백신이 다음 계절 유행을 주도하는 바이러스에 잘 맞는 백신으로 구성이 돼서 접종을 진행한다면 겨울 유행은 오히려 폭이 줄어들고 내년 봄, 여름 유행도 좀 빨리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여름철 독감 환자가 급증하면서 ‘소아과 오픈’부터 감기약 등 의약품 품질 현상까지 의료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의약품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엄 교수는 “정부가 의약품의 공급이나 생산 유지 관리와 재고 관리와 관련된 기능을 잃어버린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면서 “테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령을 만들거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소아과 대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낮은 수기와 인력난 등 열악한 소아청소년과의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의료 정책이 변화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소아과 오픈”같은 상황 자체가 결국은 소아 진료 체계나 소아과의 위기와도 맞물려져 있다”며 “소아과 진료 또는 필수 의료 영역의 위기는 팬데믹의 문제가 아니라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의료 대응 체계를 잡아가느냐의 문제다. 지금부터 논의해야 하며 근본적인 논의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의료 정책이 바뀌는 수밖에 없다. 소아과의 가장 큰 문제는 검사가 없다는 것이다. 고가의 검사나 시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환자만 보는데 환자 수가 똑같다”면서 “(의료인력) 비급여를 하는 미용 쪽으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들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선욱기자



### 고흥경찰, 등교맞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실시

고흥경찰서(서장 허향선)는 18일 어린이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추어 고흥중학교에서 타부서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보성경찰, 다중 밀집지역 특별치안활동 전개

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다중 밀집지역 흉기난동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17일 화천면 율포술밭해수욕장에서 민 경 합동순찰을 실시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순천 연향파출소 “자율방범대 합동 특별순찰” 운영

순천경찰서(서장 김남희)는 최근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자율방범대 합동 특별순찰’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승호기자



### 광주 동부소방,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 교육훈련 실시

광주 동부소방서(서장 송민영)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예방을 위한 호신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슬비기자



### 여수해경, 고민관 해경서장과 직원들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분위기에 지역 수산업계 위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 완도해경, ‘완도 활전복 구매 캠페인’ 가져

완도해양경찰서(서장 박기정)는 지난 16일 ‘지역 수산물 함께해’ 소비 촉진 캠페인 동참에 이어 지역 수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완도 활전복 구매 캠페인”을 가졌다고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광주 북구 ‘성범죄’ 실업팀 선수에 퇴직금...관리 소홀 논란

### 소속 선수 ‘주거침입 준강간’ 수사·재판 이어지는 데도 1년 간 몰라

광주 북구청이 산하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의 성범죄 사실을 1년 동안 몰라 퇴직금까지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 북구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구청 실업팀 선수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7년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 동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머무는 모텔 객실에까지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나갔다 온 사이 일행이 잠든 것 같다. 문 열어달라”는 거짓말로 종업원을 속여 B씨의 객실

에 침입,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대 성 비위를 저지른 A씨가 1년간 광수사기관과 별정을 오갔지만, 정작 관리 주체인 북구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실업팀 선수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2년 단위 계약)’인 만큼,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1차재(전지훈)만 제외하면 훈련·대회에서 빠지지 않아, 코치진조차 성범죄 비위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 사이 A씨는 “투병 중인 가족을 돌보겠다”며 돌연 사의를 밝혔고 북구는 지난달 31일 의원 면직(사직) 처리했다.

북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소속 선수의 징계 규정(견책·감봉·해임)이 있었

지만, A씨는 어떠한 징계도 없이 팀을 떠났다.

오히려 이달 1일과 3일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1832만 4140원과 퇴직자 연가보상비 16만 9650원이 지급됐다. 재원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일반 보전금’ 명목의 주민 월세였다.

실업팀을 주기적으로 지도·감독하는 담당 부서와 코치진 모두 선수단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북구 관계자는 “재판 선고 이후에야 A씨의 성범죄 사실을 알았다. 수사 개시 기간 통보 대상자가 아니었고 감독조차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서 “공무원 신분인 아닌 만큼,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퇴직금 환수 조처는 어렵다. 선수단 관리·감독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유니기자



### 피서철 막바지 제주 표선해수욕장서 물놀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20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표선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 법 “초과수당 부풀려 부당 수령한 경찰관 강등 마땅”

### 지난해 벌금 1500만 원 선고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경찰관이 강등 징계 처분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나주경찰서 경무과에서 경감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8년 4월 20일부터 2021년 12월 20일까지 45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시간을 부풀려 수당 2123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당시 통합 포털 초과근무 시스템(e사람)에 근무 현황을 허위 작성한 행정과 등과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비위 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강등 처분됐다.

A씨는 강등 처분은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초과 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기간과 횟수, 초과근무 시스템 조작을 목인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 정도가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A씨의 의무 위반 행위는 경찰 공무원 징계령 상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다. 이 경우에도 강등에서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즉, A씨에 대한 징계 양정이 세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징계 기준에 부합한다.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주=송준표기자